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7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16.(목) 오후 3시30분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7. 16. (목)	
비고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과장 박진서, 서기관 김학배, 연구관 김준호 (043-870-5410, 5413, 541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산업통상정책과	과장 윤현주, 사무관 조성래 (044-200-2211, 2212)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품안전관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국조실 등 12개 부처청)

◆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정보수집(빅데이터수집) → 분석(위해도 평가) → 제품출시 前(안전인증) → 제품출시 後(유통감시) 등 단계별 제품안전 강화

◆ **(비관리제품 조정)** ① LED 마스크 등 이미용기기 → 식약처(안전기준 마련), 산업부(개별제품관리) 공동관리, ② 인쇄용지 등의 감열지 → 산업부 관리

□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문승욱) 주재로 7월 16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비관리제품 :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으로 현재는 안전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위해가 우려되어 사전 안전관리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

*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붙임1),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회의개요(붙임2)

○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17년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 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 >

- **(성격)**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간 협력.조정**(국무총리 소속)**
- **(기능)** ①종합계획 수립, ②제품안전 부처 협업, ③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④그 밖의 제품안전 관련 중요한 사항
- **(위원)** 국조실 2차장**(위원장)**,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간사)**,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청

□ 이번 협의회는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간 시장장벽은 낮아지고,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유통이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 특히, 새로운 융복합·신기술 **제품이 개발·확산**됨에 따라 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도 위협받음에 따라,

○ 제품안전 관련 12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는 신속지원**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과제별 주요내용 >

① **(정보수집·분석)** 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 상품·구매정보, 시험인증정보, 위해결함정보, 표준·안전기준정보 등 통합

○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 로봇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정보를 자동확인하여 불법·불량 제품 등을 자동추출하는 시스템

② **(제품출시 前)**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을 적극 활용**하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 실증특례, 행정규제기본법), 융합제품인증(융합촉진법), 신속인증(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한 제품인증, 전안법)

○ 아울러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시험비용·현장컨설팅** 등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 지침 개발·표시기준 강화 등 소비자 안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③ **(제품출시 後)**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유입 제품의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상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단속팀 신설 등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확대 예정**입니다.

④ **(기반조성)**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중유통중인 **비관리 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관리되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 안전한 제품이 확산되도록 **제품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도 실시** 계획입니다.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요약

① **(정보수집·분석)** 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추진

* 상품·구매 등 빅데이터 플랫폼, 불법제품 자동식별 시스템, 정보포털 고도화 등

② **(제품출시 前 관리)**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 융복합인증, IoT·AI 소프트웨어 안전평가, 현장컨설팅, 시험비용지원, 취약계층 안전가이드 개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모듈인증 도입 등

③ **(제품출시 後 관리)** 국내시장 유통 이전에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제품 단속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시장 사후관리** 실시

* 통관검사강화, 유통제품조사·단속강화, 사전단속팀 신설, 구매대행제품 안전조사, 리콜 전담책임제 도입, 양벌규정, 과징금 도입검토 등

④ **(기반조성)** 부처간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안전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실시**

* 비관리제품 발굴강화, 관계부처·국제협력강화, 관리원역량강화, 시험인증·제품안전 강화 기술개발, 교육·홍보 다각화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 그간 LED 마스크 등의 미용기기*가 보급·확산되고 있으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의 일부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 사례 :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 미용기기 특성상 어느 부처에서 단독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식약처) 인체위해성, 오존발생량 등의 안전기준 마련, (산업부) 개별제품 관리

□ 또한, **비스페놀A*가 검출**된 감열지는 **영수증 인쇄용지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간 국회 등에서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되어 왔습니다.

* 비스페놀A : 플라스틱 용기, 알루미늄 캔, 감열지 등 각종 제품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짐

○ 이번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생활용품에 포함된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고, 감열지와 유사한 벽지·종이 장판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장 마무리 말씀

□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좀 더 촘촘히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국무조정실 문승욱 2차장**은 **제품안전에 관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하였으며,

○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해 안전관리를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품** 등이 없도록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김학배 서기관(☎ 043-870-5413), 김준호 연구관(☎ 043-870-54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도표)**

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현재와 변화



제3차 종합계획	제4차 종합계획
제품 생산·유통·사용 全과정의 영역별 안전관리 체계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수집분석, 제품출시 前/後 등 단계별/선순환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생산 인증 → 수입 유통 → 사용 소비 → 소통 역량	Sensing 위해정보 수집 → Analysis 위해요소 분석 → Pre-control 제품출시 前 관리 → Post-control 제품출시 後 관리 → Feedback

추진 전략

	As is	To be
01 위해정보 수집	개별 데이터 관리	제품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험 인증, 위해 결함, 리콜 불법, 통관 정보, 상품 구매	시험 인증, 위해 결함, 리콜 불법, 통관 정보, 상품 구매
	불법 온라인 제품 직접 신고	불법제품 자동식별시스템 구축
	미인증 리콜제품 온라인판매 → 모니터요원·소비자 신고 → 위해제품 여부조사 → 쇼핑몰 통보 개선	소비자 참여 안전감시 앱 개발 / 자동선별 시스템(RPA) 개발 / 쇼핑몰 신고 체널 개설
02 위해도 분석	위해도 평가 사업	전담 위해성 평가 센터 구축
	정보수집 → 관리원 / 제품시험 → 시험기관A, B, C / 위해도평가 → 관리원	정보수집, 제품시험, 위해도평가 → 관리원 → 종합분석 노출평가 화학평가 물리평가 전기평가
03 제품출시 전(前) 안전관리	융복합 신제품 개발 → 인증 지연 → 시장출시 지연 → 기업 기술혁신 불가	융복합 제품 시장 촉진
		규제샌드박스 FREE + 융복합제품 적합성인증 + 신속 안전인증
	사물인터넷(IoT) 및 AI제품 출시 확대 / 소프트웨어, 해킹에 대한 안전성 우려 / 보안대책 필요	SW기능 안전성 평가인증 적용 검토도입 /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제품의 안전도 평가 방법 개발
	영세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현장방문 컨설팅, 시험비용 지원, KC, KS등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모듈형 인증 제도 도입	
	소비자 안전강화	
	안전취약계층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제도개선, 위해제품 효력상실, 표시기준 강화	

04 제품출시 후(後) 안전관리

수입제품 통관검사	수입제품 통관검사 강화
세관장 확인품목 83% / 인천(본부, 공항,신항), 부산, 평택항 등 5개 세관	세관장 확인품목 90%이상 / 테마품목, 위해우려품목 집중검사 / 군산, 광양 세관 등 2개 추가 / 파견인원 확대 6명→9명
유통제품조사	**유통제품 조사 강화**
오프라인 매장 감시 / 시기별조사 (소비자 사용시기) / 전담팀 부재 (불법신고 접수 후 조사)	온라인 집중감시 / 선제적 조사 (소비자 구입사용 前) / 사전단속팀 신설
구매대행제품 안전관리 강화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 조사 해외리콜 정보제공 / 온라인몰 사업자 고지의무 준수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 계도 / 구매대행 금지품목 조정 리콜 시 유통사 판매차단 의무부과	
위해제품 신속차단 및 리콜이행 강화	
리콜제품 차단매장 확대 유통사 SMS, 관련기관 앱 등으로 전파 / 업체별 리콜관리 책임자 신설 / 위반업체 처벌 강화 (양벌규정 도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도입검토)	

05 안전관리 기반조성

비관리제품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 관리체계 개선
비관리제품 위해 우려 / 소관부처 불명확으로 사각지대	소관부처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비관리제품 발굴강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서울사무소 1개 운영 / 민원 위주 조사 업무 / 국제협력체계 구축 미흡	광역안전망 구축 + 취약계층 지원 위해도평가체계 확립 +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강화
기업 지원	**기업 지원 확대**
콜센터 운영 / R&D사업비 (50억원) / 시험비용지원 없음	인증 관련 온·오프라인 컨설팅 / R&D 사업비 증대 노력 /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등 시험비용 지원
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정보제공 다각화	
제품안전체험시설 증대 (유아·어린이) / 교재개발 및 특강신설 추진 (청소년 교사) / 안전점검 및 순회 교육 실시 (노약자·소상공인) / 유튜브 활용한 안전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붙임 2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7. 16(목), 14:00~15:10 (70분)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

□ **참 석** : **국무조정실 2차장(주재),**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청

□ **상정안건** : ① (의결안건)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
② (의결안건) 2019년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안)
③ (보고안건)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추진현황

□ **세부일정**

시 간		소요 (분)	회 의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4:00	14:05	5	개회 (인사말씀)		위원장
14:05	14:10	5	참석 위원 소개		간사
14:10	14:50	40	안건보고 및 검토		
14:10	14:30	20	의결	(제1호)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	산업부
				안건 논의 및 의결	
14:30	14:40	10		(제2호) 2019년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안)	관계부처
				안건 논의 및 의결	
14:40	14:50	10	보고	(제3호)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추진현황	관계부처
				안건 논의 및 의결	
14:50	15:00	10		기타 안건 논의	
15:00	15:10	10	향후 일정 공유 및 폐회 (마무리 말씀)		위원장